

본선보다 뜨거운 단일화... 서울교육감 선거 구도 '윤곽'

진보, 정근식 교육감 포함 5인 경쟁 보수 진영, 100% 여론조사 확정 이달 말부터 4월 초 단일후보 결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일 후보 확정 여부가 사실상 본선 구도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양 진영은 '경선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달 말 단일화 경선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구도가 정리됐다. 그간 출마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단일화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경선 틀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강민정 전 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의 상임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5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정 교육감은 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 협약 등 단일화

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만큼, 교육 행정과 선거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3월 신학기 일정과 경선 일정이 겹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분열 없이 한 명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비교적 분명해, 절차 관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수 진영도 일찌감치 단일화 원칙을 세웠다.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 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는 후보 간 협의를 거쳐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정했다.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신평 공경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견주 전 한국교총 대변인,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중 토론회를 거쳐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선거인단 구성이나 전문가 평가 방식은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역량이 초반 판세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인 강해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번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단일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4~5세로 확대

교육부, 학부모 비용 부담 줄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액 차감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세배를 연습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 /뉴시스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약 50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0만 30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확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왔다.

지난해 지원 효과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가 늘어나고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관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학교폭력 학생선수, 대회 참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훈련과 경기 중 발생하는 학생선수 부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표준 대응 절차가 도입되고, 중상 사고는 48시간 이내 의무 보고 체계로 관리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는 물론, 선수 등록도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 학교운동부는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로 이어지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훈련을 줄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도 새로 마련됐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이라 하더라도 숙소와 훈련장에 대한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도민 체감 '교통혁신사업' 추진

2842억 들여 교통 효율 향상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은 곤지암·도척 일대를 연결하고 국도3호선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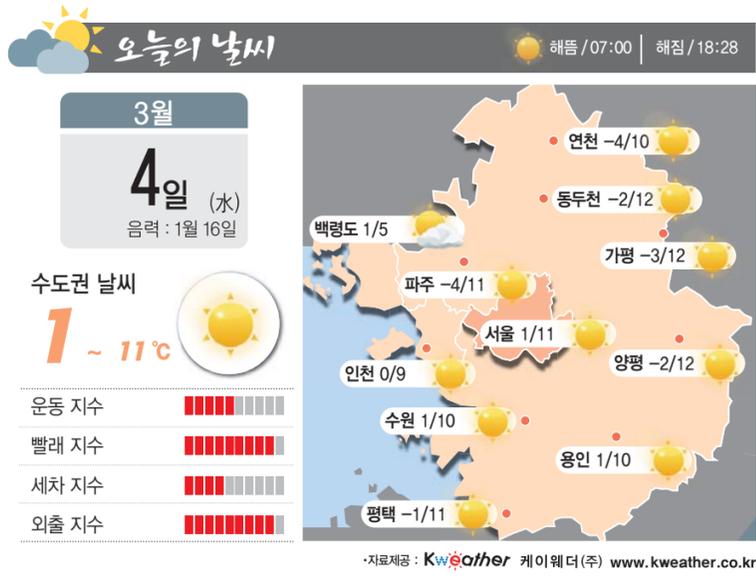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동남부 사업벨트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성 공도~양성 구간은 굴곡지고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해 고삼 호수 접근성을 높인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은 선형개량,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 준공된 적성~두일 구간과 연결해 지역 내 물류 및 교통 효율을 향상시킨다.

또한 현재 공사·보상·설계 등 단계에 있는 계속사업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병행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픈시, 미국 국방부와 계약 수정... '대중 감시 금지' 조항 추가 /사진 뉴시스
▲3000만원 이란 드론 잡는데 59억 패트리엇 쏘...美 힘겨운 소모전

▲'반대 60%·사망 6명'에도...트럼프 "지상군 투입 '울렁증' 없다"
▲미 USTR "한국, 디지털서비스법美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2세대 스타링크, 지상망 수준 연결 목표"...스페이스X 공개
▲마크롱 "핵탄두 보유량 늘리겠다"...유럽 핵우산 속도